

통합특별시 명칭·광역의회 정수 조정 어떻게 할까

광주시·전남도·지역 국회의원
18명 회동 특별법안 공식 논의
전남 “명칭에 ‘전남’ 우선돼야”
광주 “광주의원 수 23명 늘려야”

광주·전남통합특별법 마련을 위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의 첫 간담회에서 ‘통합시 명칭’과 ‘광역의회 정수’ 문제가 현안으로 거론됐다.

전남지역은 ‘광주 쓸립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통합시 명칭에서 ‘전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광주에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원수 조정을 요구하는 등 논란을 예고했다.

15일 서울 국회에서 광주시·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이 만나 처음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을 공식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방안 등에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시·도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전남지역 일부 의원은 통합시의 명칭에 대해 ‘전남’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광주시 중심으로 통합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식 조찬간담회에서 일부 전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라도’라는 명칭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통합시의 명칭은 ‘전남’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사용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남에서 광주시가 분리된 만큼, 전남의 명칭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이후에도 대도시 쓸립 현상 탓에 광주시 중심으로 힘의 균형추가 기울 수 밖에 없어 명칭이라도 전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광주라는 명칭이 우선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냈다.

시도가 명칭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독특한 행정 체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직할시 승격 이후 광역시 중심의 ‘직접사무 형태’로 일선 구청의 행정이 집행된 반면,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위탁사무 형태’로 권한이 배분돼 서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일부 허가 업무의 경우에도 광주시 구청은 권한이 없어 광주시가 처리하고 있지만 전남 22개 시·군에는 권한

이 부여돼 있다. 이에 따라 명칭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어느 쪽이 중심이나에 따라 행정 시스템의 세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광주구청장협의회 임택 회장(동구청장)이 참석해 광주시 일선 기초단체의 현황과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광주 정치권에서는 정치권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시도 국회의원 비공개 회동에서 광주지역 상당수 국회의원은 ‘광주시의회 과소 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원은 20명이며,

전남도의회는 55명이다. 인구 대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면, 광주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6만 1000여명인 반면, 전남도의원 1명당 대표 인구는 2만 9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주의원 수를 23명 늘려 43명으로 조정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시·도 통합이 이뤄지면 광주 지역의원 정수를 현 20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통합 광역의회가 꾸려질 경우 상대적으로 광주지역 광역의원의 수가 적으면 광주시가 불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광의원 수 부족은 고스란히 지역위원회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정사도 그대로 사용하고 시군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어긋나 정부에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전남도, 27개 시군구 순회 행정통합 공청회 의견 수렴

시·도민 목소리 듣기 소통 대장정
19일부터 월말까지 공감대 확산

광주시와 전남도가 성공적인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시·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소통 대장정’에 나선다.

19일부터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전역을 훑는 강행군을 바탕으로 공감대 조성에 나서는 등 여론을 수렴해 통합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퀄레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는 관 주도의 일방적 통합 논의를 넘어,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확산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광주에서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동구를 시작으로 서구(22일 오후 5시), 광산구(23일 오후 4시 30분), 북구(28일 오후 3시), 남구(28일 오후 4시) 순으로 이어진다.

전남지역 역시 19일 오전 10시 영암군에서 첫 테이프를 끊는다. 이어 장성군(20일 오전 10시), 서남권 통합의 핵심 지역인 목포시와 신안(21일 오후 2시)·무안(오후 4시 30분)군과 장흥군(23일 오후 2시)을 잇달아 방문한다.

나머지 시·군 일정은 중 세부 조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물론, 이정

선·김대중 시·도 교육감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출동해 주민과 머리를 맞댄다.

이들은 주민에게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추진 방향, 통합 이후의 정사진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별 우려 사항과 견의 사항을 정취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현장 공청회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개설, 민관 추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숙의·공론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시·도는 공청회에서 도출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중 밸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언제 어디로 어떻게 배치되나…공직사회 ‘술렁’

광주와 전남 공직사회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으로 술렁이고 있다.

양 시·도 공무원들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공무원 노동자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광주시 청, 교육청, 교사, 소방 공무원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공무원 희생을 담보로 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통합 논의는 ‘반쪽짜리 국가직’인 소방 공무원을 또다시 지역 행정의 하위 단위로 둘러 하는 것”이라며 “통합 논의에서 소방 사무를

분리하고 예산과 지휘권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해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력을 확보하는 국가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 논의에서 ‘교육’이 없다”며 “통합에 따른 교육자치 특례에는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확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충분한 준비와 의견을 들어야만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광주시 청, 교육청, 교사, 소방 공무원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공무원 희생을 담보로 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시·도가 통합되면 공무원 불이익이 없

다고 하는데 의문이 생긴다”며 “승진 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남약에 자가를 구입한 직원들은 집값 폭락으로 대출이자를 갚으며 허리띠 졸라매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광주광역시교육청